

## ■ 2017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

국편이 제시한 일정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6년 11월까지 집필이 끝날 전망이다. 2016년 12월에는 검토, 감수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이전 인쇄와 배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내용은 국편 내부의 시대별 전공자로 이뤄진 중·고교 팀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기관이 담당한다. 공신력 있는 역사기관도 내용을 감수하고 국립국어원은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을 살핀다.

교과서 집필진은 중·고교, 시대별로 팀을 구성해 중학교는 3~4명, 고교는 2~3명이 각 시대를 집필한다. 국편은 집필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완성된 글을 취합해 정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종 검토본을 역사교과서 특별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성완중 리스트’ 파문 ...이완구 총리 낙마

### ■ ‘성완중 리스트’ 정치권 강타...정국 ‘안갯속으로’

성완중 리스트 파문은 2015년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다. 여권 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으면서 정국을 한 순간에 안갯속으로 빠뜨린 비리 의혹이었다.

사건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던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메모 한 장과 언론 인터뷰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성완중 리스트’로 불린 이 메모에는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여권 핵심 인사 8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인 이병기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었다. 몇몇 인물에 대해서는 ‘금품의 액수’까지 메모에 적혀 있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자사 기자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메모 속 금품거래 의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찰 수사를 받던 복잡한 심경까지 담은 인터뷰였다.

여권 내에서도 위세가 컸던 인사들이 등장하는 메모는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특히 홍 의원과 서 시장, 유 시장 등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금품거래 의혹은 여당의 대선 자금 관련 의혹으로도 번질 만한 폭발력을 지닌 것이었다.

## ■ 82일간 달렸지만 ‘주마간산’에 그친 成리스트 수사... 대선자금·특사로비 의혹 미궁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만인 4월 12일 문무일 검사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의혹 규명은 쉽지 않았다. 핵심 인물인 금품 공여자, 즉 성 전 회장이 고인이라는 점이 최대 난관이었다. 경남기업 측이 자원개발 비리를 감추기 위해 방대한 양의 내부 문건을 파쇄하거나 빼돌린 점도 걸림돌이었다.

검찰은 경남기업 내부 자료를 빼돌리는 데 관여했던 측근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했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 씨 등을 증거는닉 혐의로 구속한 뒤 이들이 기억하는 성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가 있는지도 추적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특별수사팀은 전직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한모 씨 등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과정도 집중 조사했다.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와 비자금 추적 작업은 보름 넘게 지속됐다. 그리고 리스트 속 8명의 정치인 중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큰’ 2명의 대상자가 나왔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였다.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에 금품거래 의혹 시점과 액수가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당시 현직이었던 이 전 총리는 4월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메모 속 의혹은 사실무근이지만 국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 전 총리는 밝혔다. 그는 2월 17일 총리직에 취임한 이후 70일 만에 낙마했다. 1980년 대통령 단임제 실시 이후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도 기록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사의 표명 이틀날 이 전 총리의 일정 담당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홍 지사 측 일정 담당자도 함께 소환됐다. 홍 지사 역시 메모 속 금품거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주변인 조사를 거친 검찰은 홍 지사를 5월 8일에, 이 전 총리를 5월 14일에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월 14일 오전 성완중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두하고 있다.

터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 성 전 회장으로 부터 직접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힌 검찰은 리스트 속 남은 6인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도 공소시효를 완성한 사안도 있었다.

2006년 9월 성 전 회장으로 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5년)은 물론 뇌물죄(7년)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무렵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허태열 전 실장과 메모지에 이름만 적혀 있는 이병기 실장도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단 특별수사팀은 5월 29일 리스트 속 6인에게 일제히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다. 6월 들어 대선캠프에서 요직을 맡은 3인 가운데 서 시장과 유 시장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를 벌였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6월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성 전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해 연말 특별사면된 과정에 금품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를 받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권병 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단서가 나왔지만 두 의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특별수사팀은 7월 2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착수 82일 만의 발표였다. 그간 검찰은 총 140명을 상대로 460여 차례 조사했고 압수수색도 33차례 이뤄졌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만 9.3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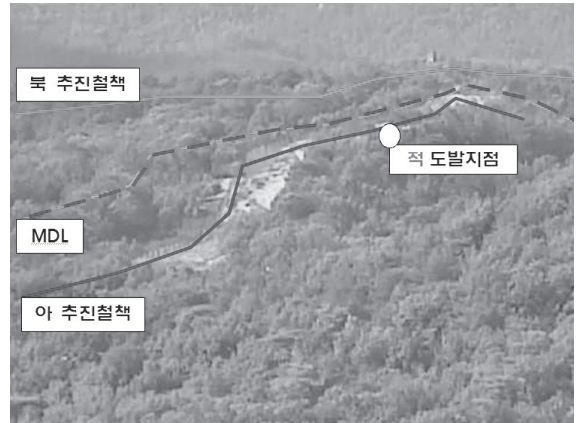
그러나 리스트 속 8명 중 기소 대상자가 2명에 그쳐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스트 속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은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

아울러 대선자금이나 특사 관련 의혹 역시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 北 지뢰도발에도 8·25 합의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개최

### ■ 北 목함지뢰·포격도발…긴장감 휩싸인 휴전선

2015년 8월 4일 오전 7시 35분과 40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보병 1사단 11연대 비무장지대(DMZ) 구역에서 두 차



▲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내용을 8월 10일 발표하고 “북 도발에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 관측소에서 바라본 사고발생 현장 <합참 제공>

레의 폭발이 일어났다. DMZ로 투입되는 우리 군 병력이 이용하는 출입문인 추진철책 통문(폭 1.5m)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잇따라 터진 것이다.

통문을 지나려던 하모(21) 하사가 두 다리를 잘랐고, 하 하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모(23) 하사도 2차 폭발에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폭발물의 정체는 북측이 우리 군의 이동통로에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 3기로 드러났다. 북측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나 8월 17~28일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방해, 남남갈등 유발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도발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은 같은 달 10일,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된 이후 11년 만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수일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15일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의 공개경고장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어 20일 오후에는 서부전선에서 남쪽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행했다.

우리 군은 북측이 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mm 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사격한 뒤 최고수준 경계태세를 발령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병력을 전진배치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에 휩싸였다.

### ■ 일촉즉발 위기서 합의 도출…반전드라마 써낸 남북

그러나 북측은 다른 한편으로 대화 카드를 꺼내드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북한 대남업무를 총괄한 김양건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는 8월 21일 오후 4시께 본인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21일 혹은 22일 판문점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대 1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